

연합노보



뉴스통신진흥회 Q&A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다.
자세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5

제 호
177

10.27 목

4면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종로구 수송동 85-1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정재용 · 편집인 도광환

노조, 총액 8.5% 인상안 제시

대의원대회서 확정.. 24일부터 노사 임단협 개시

노동조합은 금년도 임금협상과 관련, 지난해 임금에 비해 총액 대비 8.5% 늘어난 노조측 인상요구안을 마련해 시총과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정재용 노조위원장
과 장영섭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년도 임·단협 제 1차 전체회의에서
노조측 인상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상견례를 겸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몇년간 임금에 동결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 만큼 올해는 대다수의 조합원 및 사원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노조측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콘텐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합원 및 사원들의 노력과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며 격

러한다"면서 "다만 뉴스통신진흥회 출범과 뉴미디어 사업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경영실적, 외부 언론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임단협 실무협상단을 구성, 오는 27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노조측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되 급식·교통수당, 가족수당, 공휴수당 등도 조정, 전 사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실무협상단으로 노조측에서는 도광
환 사무국장과 최현주 총무부장, 옥철
쟁의부장을, 사측에서는 박정찬 경영기



24일 열린 노사 임·단협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장영섭사장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획실장과 권진택 기획부장, 신을호 인사부장을 각각 선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금년도 제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1시간30여분의 열띤 토론 끝에 '8.5%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

대의원 대회에서 정 위원장은 “18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본급 인상분이 전체 임금인상분의 50~60% 수준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위원장에 이창우씨 노조, 사장추천위 구성에 전력, 성명서 채택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출범함에 따라 사장추천위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사장추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진흥회 이사들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직후 성명을 발표, “진흥회 이사진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합뉴스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서 “이사들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누구에 의해 임명을 받았던간에 임명된 순간부터는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성명은 “경영진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진흥회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차기 사장 추천 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전통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진흥회는 이사진 선출 등 내부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장추천위 구성 문제를 비롯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노조는 24일 오후 인사차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이창우(李昌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성명은 지난 21일 진흥회 출범에 대비해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이창우 전 부산일보 논설고문을 비롯해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동영 KBS 해설위원, 장동훈 전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이문호 전 연합뉴스전무, 성병욱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마권수 방송협회 사무총장 등 7인을 진흥회 이사로 임명했으며, 진흥회 이사들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전 부산일보 논설고문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창우 초대 이사장은 1935년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일보 편집국장과 전무이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거쳐 '부산'을 가꾸는 모임' 공동대표로 활약해 왔다. ■

조합원 85.9%
“1년새 노동강도 강해졌다”

노동조합이 금년도 임·단협과 관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임금이 6~9%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특파원, 해외연수자, 노조전임자 제외)을 대상으로 임단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70.9%인 28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결과 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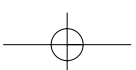
금년도 임금인상을 기대치를 물은 결과, 6~9% 선을 꼽은 응답자들이 29.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12%(25.26%) ▲12%이상(22.81%) ▲3~6%(16.84%) ▲0~3%(3.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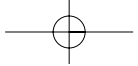
임금협상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로는 기본급 인상을 지적한 조합원들이 78.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각종 수당체제 개선을 통한 인상 13.68%, 상여금 인상 3.86% 등으로 응답,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수년간 동결됐거나 2% 수준에 머물렀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노동강도의 변화를 묻은 결과, 조합원들의 85.9%가 '매우 강해졌다' (28.7%), '강해진 편이다' (57.2%)라고 응답, 강화된 노동강도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보만평

반조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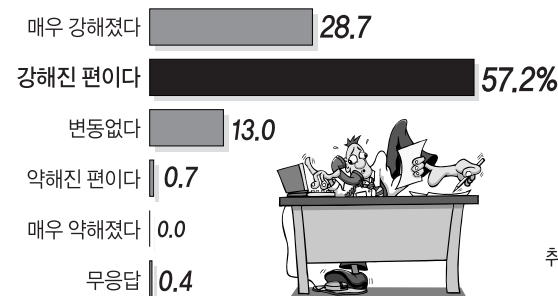


2005년 10월 임단협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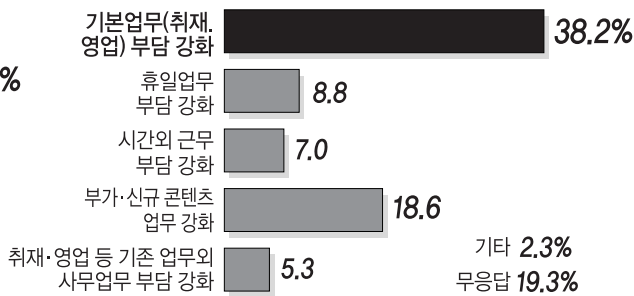
● 실시기간: 10월10일(월)~10월14일(금)

● 실시대상: 설문대상자 402명 (총조합원에서 노조전임, 특파원, 해외연수자 제외) 중 285명(70.9%)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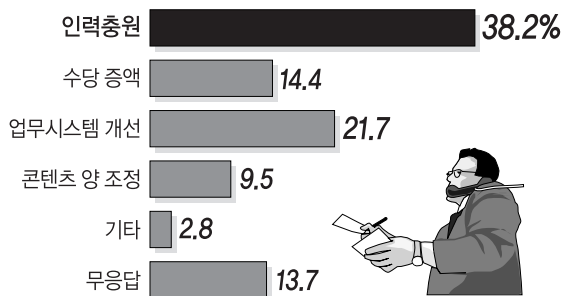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노동강도의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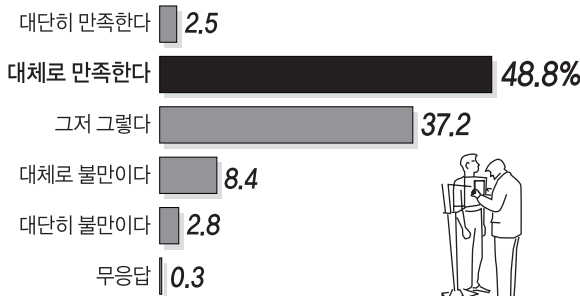
● 노동강도가 강해졌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과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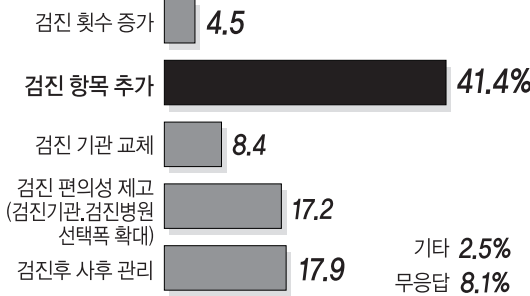
● 노동강도가 강해졌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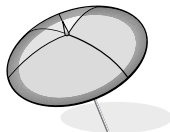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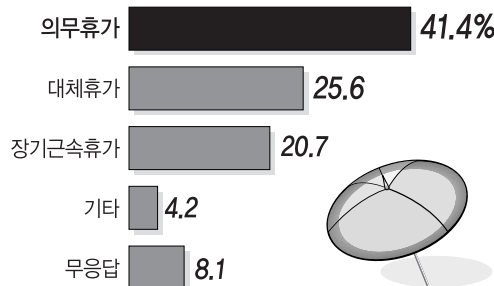
● 현행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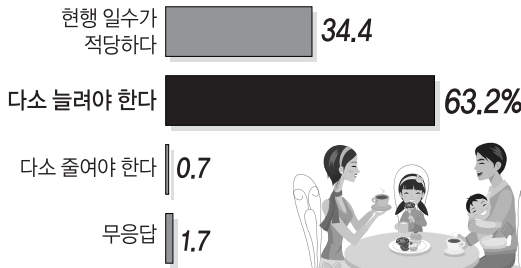
● 건강검진 보완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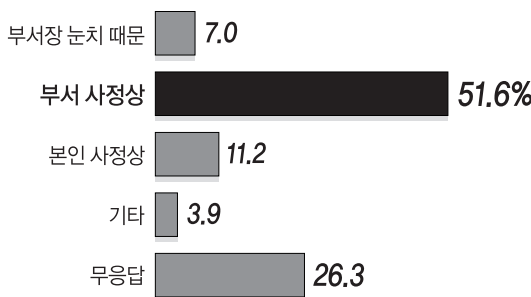
● 현행 휴가제도 중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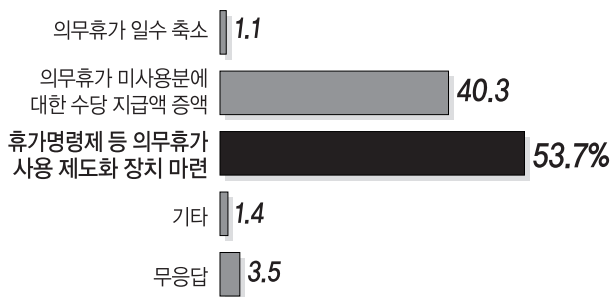
● 의무휴가 일수(현재 7일)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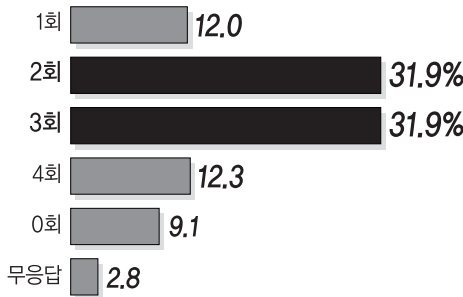
● 의무휴가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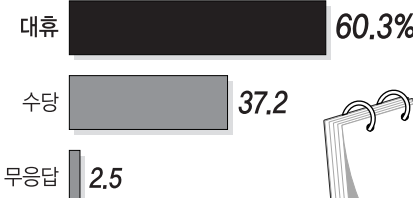
● 의무휴가를 채우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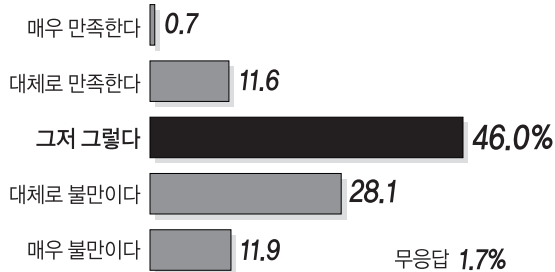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토·일 연휴)를 한 달 평균 몇 회 가장 이용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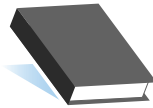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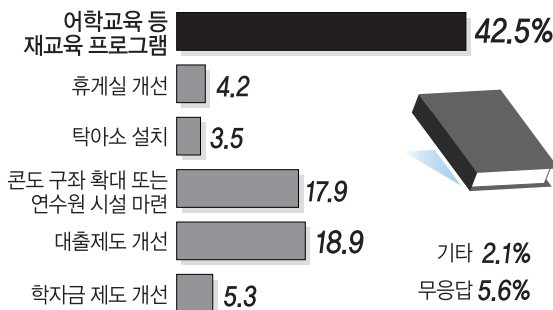
● 토요일근무나 일요일근무 등 대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휴와 월차수당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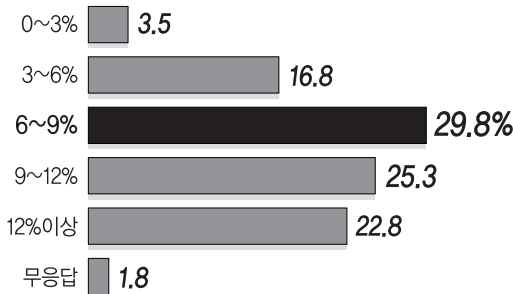
● 회사의 현행 복지제도(콘도,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 각종 대출제도, 어학교육 지원 등 재교육, 학자금 보조, 휴게실)에 대한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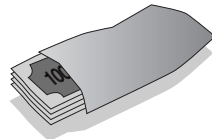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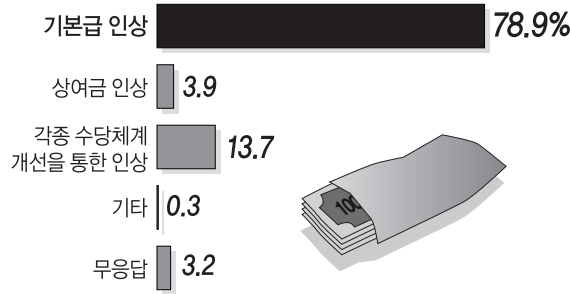
●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신설돼야 할 복지제도는? (하나만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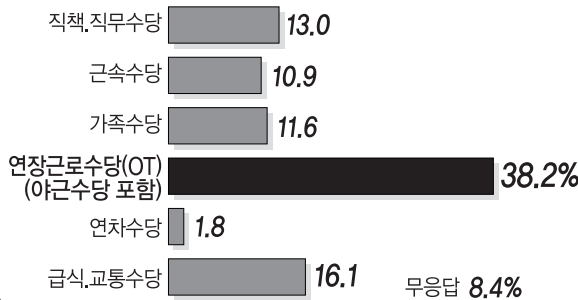
● 금년도 임금인상을 기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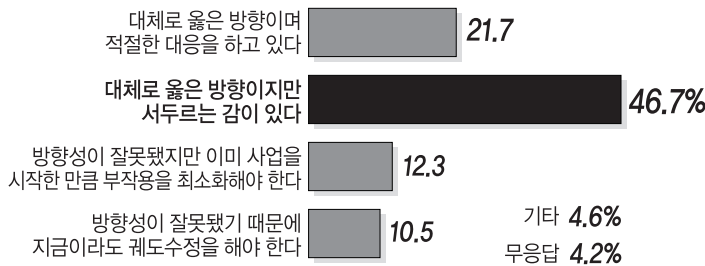
● 임금협상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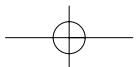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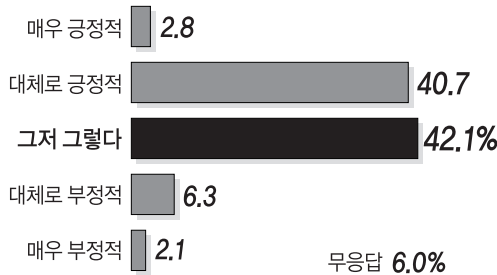
● 수당 제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수당은?



● 급변하는 언론환경을 맞아 회사는 콘텐츠 강화, 뉴미디어 사업 확충 등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기조에 대해 사내에는 찬반 양기류가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방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어 뉴스 제작 관련국이 통·폐합된지 6개월이 됐다. 지난 4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최전선에서

독자들 애로사항 해결에 ‘최전선’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일처리 효과적

고객지원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의 최전선이랄까? 기분 좋아서 전화하는 사람은 없고 매일 뿔뿔해달란다.

그래서 고객지원부의 전화기는 늘 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데 바쁘다.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가끔 독자들의 재미있는 실수도 있다.

한번은 외부 서비스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원버튼을 눌러도 PC가 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간단한 확인 요청 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직접 독자를 방문하자마자 전원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것이다. 독자는 cd-rom버튼을 누르면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했던 것이다. 독자 동료들의 편견이 이어졌다. 속으로 무지 ‘쑥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불편 사항을 나누다 보면 독자가 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 직접 독자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요즘 같은 초고속 인터넷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부터 시간을 줄이고 간단한 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 받을 때 독자의 PC에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먼 지역에서 연합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나 연합뉴스 기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물론 사내에서도 편리할 때가 많



최동우 고객지원부

다. 처음에 고객지원부원들이 독자 PC에 접속할 때 신기하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접속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요즘은 전화를 받자마자 PC에 접속해서 점검해달라는 독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간혹 특파원들로부터 불편 전화를 받을 경우 머리 속이 난감해진다. 너무 멀어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으니.. 물론 회사에서 그 지역으로 출장을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이럴 경우 PC에 접속하여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고객지원부는 지난 연말부터 ‘통합 헬프데스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장애처리를 전담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 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해결한다. 그래서 통합헬프데스크의 고객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외부독자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객의 범주에 포함된다.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헬프데스크로 연락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선방송이나 팩스 고장신고는 받지 않는다. ■

이달의 조합활동

● 10월 5~6일 : 정재용 위원장은 전국 신문·통신사 출신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제민일보에서 1박 2일간 열린 언론노조 산하 신통노협 대표자회의에 참석..

● 10월7일 : 제21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비해 실시기로 한 설문조사 문안에 대해 토론하고 단체협상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 10월8일~10월13일 : 정 위원장은 지난달 각 지역 특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낸데 이어 모스크바와 브뤼셀을 방문, 특파원과 직접 생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 현지에서 만난 특파원들과 메일을 보내 온 특파원들은 주로 현지에 취학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 보조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함께 사무실이 없는 지역 특파원들의 경우 신문구독료를 지원하지 않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지적..

● 10월10일~14일 :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19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최근 조합원들의 노동강도가 급격히 강해졌음을 확인..

● 10월18일 : 제22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단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토론했던 끝에 금년도 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총액대비 7~9% 선에서 증액하는 내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시해 구체적인 인상 폭을 정하기로 결정..

● 10월19일 : 정위원장은 헤럴드미디어 지부에서 열린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석, 조합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

● 10월21일 : 제18대 노조 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협상안을 확정. 대의원대회는 1시간30분여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총액 대비 8.5% 인상하는 노조측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 대의원 대회에선 임금인상 요구폭을 한자리수로 할 것인지, 두 자리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기도...



● 10월24일 : 노사는 금년도 임.단협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전달.. 이자리에서 정위원장은 “최근 몇년간 임금이 동결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 만큼 올해는 대다수의 조합원 및 직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8.5%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시..

● 10월25일 : 제23차 집행부회의를 열어 임.단협 실무협상에 대비한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

● 10월27일 : 도광환 사무국장과 최현주 총무부장, 옥철 쟁의부장이 실무협상 대표로 나서 박정찬 경영기획실장이 대표로 나선 회사측과 본격적인 임.단협 실무협상에 돌입..

● 10월 27일 : 정 위원장은 헤럴드미디어 지부에서 열린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

콘도 5구좌 추가구입.. 서해안에도 콘도 마련

회사는 노조의 콘도 추가 구입 요구를 수용해 최근 대명콘도 2구좌, M캐슬 3구좌 등 총 5개의 콘도를 추가 구입했다. 이로써 회사가 보유한 콘도 구좌수는 10구좌에서 총 15구좌로 늘어났으며 연간 이용 가능 일수는 총 4백50일이다.

대명콘도의 경우 현재 설악, 홍천, 단양, 양평콘도 이용이 가능하며 2006년 4월부터는 새로 문을 여는 경주콘도 이용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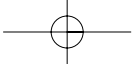
이번에 새로 구입한 M캐슬 콘도(www.oceancastle.co.kr) 구좌로는 안면도 오션캐슬과 덕산 스파캐슬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경주 대명콘도와 서해안에 위치한 M캐슬 콘도의 경우 지리적 위치

나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본사 직원들은 물론 지방 직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콘도 5구좌 추가 구입으로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1백50일 늘어남에 따라 성수기 콘도 이용 불편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회사 콘도 사용일수는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백17일을 사용했으며(사용가능 일수 총 3백일) 금년에는 9월2일 현재 1백91일을 사용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8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측에 콘도 추가구입을 요청한 바 있다. ■



성명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에 바란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위원장 정재용)는 일단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3년 가량 표류해온 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가 매듭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연합뉴스 노조는 그동안 사내외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개혁성을 갖추고 뉴스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진흥회 이사로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의 추천 등을 거쳐 오늘 선임한 이사진이 연합뉴스 노조와 사원들이 제시한 이러한 인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일단 연합뉴스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사진 개개인에 대한 입장표명은 유보하고자 한다.

- 당파적 이익 아닌 언론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
무엇보다 진흥회 이사진들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합뉴스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사진들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흥회 설립목적을 한시라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사들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거나 누구에 의해 임명을 받았던간에 임명된 순간부터는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나아가 우리나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사장추천위·공모제 방식 전통 지켜야 -
특히 경영진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진흥회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차기 사장 추천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모제 방식의 전통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장추천위 구성과 공모제 방식은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지난 2003년 현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노조원 1인시위 등 치열한 대외적인 노력을 통해 쟁취한 제도

이다.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회 설립위원들이 작성한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초안에도 '이사회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 14조 4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사장추천위 방식은 대다수 공기업은 물론 공익적 성격이 강한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진흥회는 이사장 선출 등 내부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장추천위 구성 문제를 비롯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언제든지 진흥회 이사진과 대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태세가 돼있음을 밝히면서 이사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05년 10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뉴스통신진흥회 Q&A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2년 6개월 가량 표류하던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장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구인 점을 감안, 진흥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질문·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다.

▲ 진흥회의 설립 목적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진흥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상임이며 호선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진흥회의 주요 임무는?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며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며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책임에 대한 의무를 지며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 진흥회 이사장은 권한은. 또 상임인가?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고 답변한다. 물론 상임이다.

▲ 진흥회에 사무국을 두나?

진흥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다. 사무국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연합뉴스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 둘 것이 확실시된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돼있다.

▲ 진흥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진흥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흥회내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들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추천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 진흥회는 언제부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뉴스통신진흥법 부칙의 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진흥회가 연합뉴스사 최대주주가 된 날로부터 행사하도록 돼있다.

▲ 노조는 차기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사장추천위 구성의 전통을 지켜줄 것을 진흥회 이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진흥회 이사진 가운데 5명에 대한 임명권이 사실상 정치권과 청와대에 있는 등 외압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장추천위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사장추천위는 2003년 현 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연합뉴스 사원들이 쟁취한 전통이다.

비디오 대여 업체족 극성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제도의 하나로 지난 93년 4월 시작한 비디오대여 사업이 벌써 10년을 넘었다. 그러나 비디오나 DVD를 대여해가는 조합원이나 사원들 가운데 대여 기한을 과도하게 넘기거나 대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여하는 등 자신의 편의만 앞세우는 사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원들의 대여욕구가 높은 최신작들의 경우는 이같은 불만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특히 몇년전부터 노조가 완전 무료대여를 시작한 이후 장기대여나 분실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원들의 각성이 촉구된다.

현재에도 대여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연체료가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조의 독촉전화를 받고 반납하는 장기 미납자의 경우에도 연체료를 내는 사원은 전혀 없다. 쑥스럽고 어색한 웃음으로 장기미납의 미안함을 표시하는 사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차례 걸친 독촉에도 꾹꾹하게(?) 항상 잊어버리는 사원들이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여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고 대여한 비디오는 독촉전화도 할 수 없다.

우리처럼 비디오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한 언론사도 이러한 부작용 탓에 최근 자사 노보를 통해 비디오 장기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디오 대여 사업이 수익과는 무관한, 사원들의 여가 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노조에서도 연체료를 받을 의향은 없다. 다만 자신의 불성실과 무관심으로 다른 사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심과 자신의 불성실을 되돌아보고 혹여 잊혀진 노조 비디오가 자신의 집 한쪽 구석에 묻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다.

